

의무 2부제·5등급 車 제한... 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배출가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와 차량 의무 2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승용차보다 6배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는 오토바이 10만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의무 2부제 검토

우선 시는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3월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시민의견 공감하며 기존 대책도 뛰어넘어야 다른 시·도와 동시시행 위해 정부와 논의도

세먼지 저감 효과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즌제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12월 시즌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차량 의무 2부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의무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홀수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묻고, 차량 의무 2부제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다른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제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일평균 약 3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기준 245만대)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운행 제한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물류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에만 운



박원순 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배달용 오토바이 → 전기이륜차로

시는 생활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올해 프랜차이즈·배달 업체(롯데마트,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 브라더스, 부릉)와 협력해 엔진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바꾼다.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과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2022년까지 통학차량을 매년 400대씩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공동주택 환기장치 공동관리 전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등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강제성 생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가져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관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합의 유도 수준에 그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제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 150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관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돌봄정책 시민의견 수렴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 열어

서울시가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내달 14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를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토론하는 창구다. 해당 기간에 시민 5000명 이상



이 의견을 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서울시는 11월까지 시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발주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대금 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을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 과제를 선정,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